

“농업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해야”

김철수 도의원, 내일 도정질문서 ‘공공과건제’ 도입 제안 예고… 주거시설 기준 강화 따른 현실적 대책도 촉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시기에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과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회(정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력의 직접 고용을 부당스러워하는 농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수요농가에 보내주는 공공과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벌써부터 농가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취업을 허가했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취업 허용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이지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과 어업인 근로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위원장은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등 장기체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농가는 농번기 한 달 미만의 단기 일감 대부분을 미등록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불법적 환경에 놓인 농촌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비닐하우스 같은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의 외국인 숙소에 대

한 정부 대책 강화로 농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가격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격리시설 확충도 요구했다.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 농업기반과 지역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불법체류라도 외국인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합법적 고용정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1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 임시회 개회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올해 9개 의원연구단체 구성

도의회, 지방자치발전·다문화·그린뉴딜연구회 등 9개 의원연구단체 구성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활동할 연구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새만금을 비롯해 환경·복지, 그린뉴딜분야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실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한다. 1개 연구단체에 5명 이상 구성되며, 의원별 3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구성된 연구단체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근) ▲인재양성 및 다문화연구회(대표의원 홍성임) ▲환경·복지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 ▲새만금·해안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나기학) ▲탄소중립실현을위한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국주영) ▲스마트농업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나인권) ▲건축자산보존·활용연구회(대표의원 이병도) ▲조례연구를통한전북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희자) ▲전북형뉴딜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용구) 등 모두 9개다.

연구단체는 앞으로 현장방문과 정책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선제대응하고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개발,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도의회는 작년 한 해 자치분권 활성화, 환경복지 정책, 미래지향적인 축산모델 제시, 친환경자동차 산업경제 발전 방안 모색, 건축자산 보전·활용 방안, 조례 연구를 통한 전북 발전 등 6개 연구단체를 구성, 활동하며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연구 성과를 거뒀다.

송지용 의장(완주)은 “올 한해 전북도의회는 지방자치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관심분야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래 취지를 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은 1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함께, 전북도내 주요 5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형 뉴딜사업’ 도내 대학들과 공유

민주 전북도당, 도내 5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당·정·학 연석회의 추진 대학 발전 적극 동행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전주 병)은 1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함께,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전북형 K-뉴딜에 대한 각 대학의 역할과 방안 모색, 그리고 총장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5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개최 이유에 대해 “대학

의 역할을 전북발전의 힘으로 만들고, 대학 지원을 통해 전북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도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대학이 K-뉴딜 모델을 잘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대학이 추진, 계획 중인 뉴딜관련 사업 공유 및 각 대학에 필요한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 드레스덴대학 등의 육성성이 독일 산업부흥과 균형발전의 계기가 됐다”며 “대학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 총장들도 “정당 초청 총장 간담회는 처음으로 앞으로 정기적

으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한 당, 정, 학 연석회의 추진 및 전북지역 대학 발전에 적극적인 동행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도당 위원장, 안호영, 임성진 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남현현 우석대학교 총장, 광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나인호 도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 서난이 도당 K-뉴딜위원회 운영위원, 유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오늘부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수) 실시하는 김제시의회의원선거 보궐선거(김제시 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신채장에 거주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궐선거 지역 내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16일까지 전입신고(정부외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

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확진자가 아닌 자가 격리자는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김제시청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용지·백구·금구면사무소, 검산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김제시청, 선거구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김제시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마감일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김제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우라도 28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국정과제로”

문 대통령, “단호한 의지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팽 투기 의혹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내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이를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담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홍성임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며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



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돼 민간 투자 유치와 기업의 투자유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 보호해야”

박용근 도의원,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정부에 촉구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의원은 15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 중 60~80%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입제를 불법으로 규정해 체 규제만 하고 있어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는 버스타사가 운전기사들 직접 고용의 형태로 고용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로 현실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의 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가 단체여행, 통학 및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여가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입제 등 전세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병명 의심되면 '1339'로